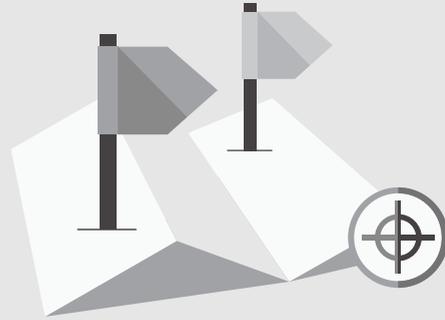


이달의 초점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생계비 지출 수준 비교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김태완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의료비 지출 부담
김기태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교육비 지출 부담
여유진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교통·통신비 지출 부담
이주미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핵심생계비 지출 부담
김기태·이주미

[부록]
한국과 유럽 8개국 가구 지출의 비교 분석을 위한 기준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주거·수도·광열비 부담¹⁾

A study on the housing, water and electricity expenditure burden of households in Korea and eight European countries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한국의 가계동향조사와 유럽의 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을 이용하여 유럽 국가와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은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소비지출 및 소득 기준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소비지출 대비 11.2%, 소득 대비 6.8%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의 노인 단독 가구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5분위로 나눠 보면, 한국은 모든 분위에 걸쳐 유럽 국가보다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낮았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전세제도 운영과 전기, 수도요금 등에 대한 통제가 일정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유럽 국가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은 월세가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도·광열비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1. 들어가며²⁾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의식주(衣食住)이다. 사람은 먹는 것을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영양분을 흡수하게 된다. 활동을 하고 추위,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복·신발과 같은 ‘의(衣)’가 필요하다. 활동 이후 휴식과 재충전을 하는 것은 물론 추위, 더위

1) 이 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전체 연구에서는 주거·수도·광열비 이외에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등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지출이면서 국가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지출 항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글은 이 지출 항목 가운데 주거·수도·광열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2) 이 글을 쓰기 위한 연구 방법은 부록을 참고할 것

등을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택, 주거 역시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주거는 인간 삶과 활동에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국가는 주택을 공급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국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현대인이 위생적인 환경과 식수를 제공받고 밤에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넓히고 더위, 추위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반이 수도·광열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충분히 먹고 의복을 입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도 위생적이지 않은 상태로 지내고 오랜 기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언제든 질병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수도·광열 또한 인간 생활의 필수 요소로 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불안정을 경험해 왔다. 특정 지역 중심의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은 주거 불안정성을 높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다른 주요 국가(미국, 일본 등)와 다르게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해 왔으며,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주택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 중산층은 전세, 월세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전월세 부담 증가는 가구의 지출 부담을 가중하는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 가격 상승으로 수도·광열비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주거·수도·광열비의 변동성 심화는 국민 경제는 물론 가계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국가도 주요 지출 비목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거·수도·광열비에 대한 부담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요 국가별로 국민이 느끼는 부담 정도가 다를 수 있다. 한국은 주거비 부담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다른 국가와 비교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부담이 늘고 있는 수도·광열비도 다른 국가에 대비해 우리가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유럽 8개국³⁾과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정도를 살펴보았다.⁴⁾ 분석 결과를 통해 저소득층, 서민 중산층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이 글에서는 비교 대상 유럽 국가의 지출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제공받은 데이터인 가구지출설문(HBS: Household Budget Survey)을 이용하였으며, 한국의 자료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지출과 소득을 기초로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분석 연도는 비교 대상 국가가 공통으로 데이터를 제공한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며, 영국만 2010년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현재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점, 그리고 국가별로 주거와 수도·광열 공급 형태, 이용 형태 및 욕구 등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했지만 여기서 그 차이를 간접적으

3) 분석 대상 유럽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의 8개 국가이다.

4) 이 글에서 주거·수도·광열비는 임대료, 주택 유지 및 수선비,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와 연료비(전기료, 도시가스 등)를 포함하고 있다(김기태 외, 2021, p. 46 재인용).

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번 분석의 한계라는 점을 미리 지적해 두는 바이다.

2. 가구 유형별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이 글에서는 유럽 8개 국가와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비교해 보았다. 비교는 소비지출과 소득을 기초로 하였으며,⁵⁾ 여기에 가구 유형⁶⁾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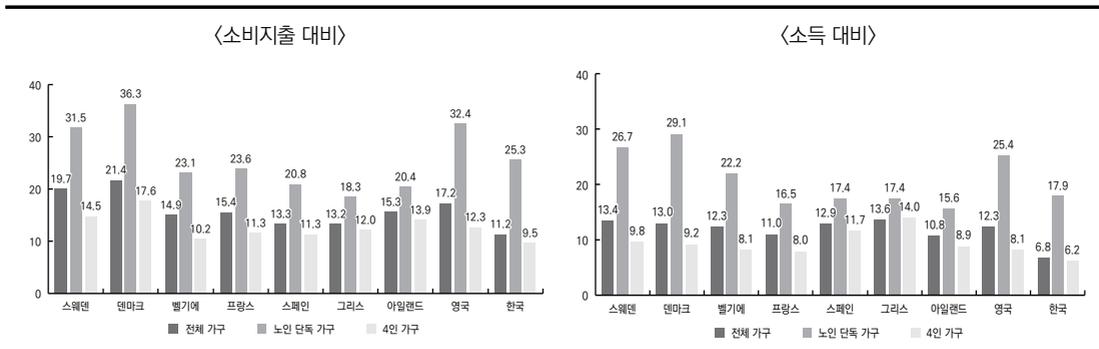
먼저 소비지출과 소득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살펴보면, 한국의 소비지출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은 11.2%, 소득 대비 비율은 6.8% 수준이었다. 유럽 국가와 비교해 보면, 한국은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 유럽 국가들에 비

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비교 대상 유럽 국가들이 모두 10%대 이상을 보여 주는 것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노인 단독 가구는 소비지출 기준으로 주거·수도·광열비가 25.3%로 스웨덴, 덴마크, 영국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소득 대비 주거·수도·광열비는 17.9%로 프랑스, 아일랜드 등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았다. 4인 가구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소비지출 대비 주거·수도·광열비는 9.5%로 벨기에의 10.2%와 유사하고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부담에서도 한국은 6.2%로 비교 대상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았다.

그림 1.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 비교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60, 62).

5) 소득과 지출은 개인의 역량과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소득은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고 지출은 개인의 욕구 수준을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주거·수도·광열비가 소득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출 역시 개인 욕구에 부합하는 주거·수도·광열비인지를 분석하였다.

6) 가구 유형은 연구 초기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연구진 간 논의를 통해 사회 변화와 규범적 측면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노인 단독 가구와 4인 가구라는 두 가지 유형만을 고려하였다.

국민은 일반적인 판단에서 주거비 부담이 높다고 보는데, 유럽 국가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주거 측면에서 유럽 국가는 임대주택이 주로 월세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은 임대주택 중 상당수를 월세보다는 전세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유럽 국가에 비해 주거비가 낮은 요인으로 보인다.⁷⁾ 또한 수도·광열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을 일정 부분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국민이 희망하는 주거 형태, 거주지 등의 여러 요소가 우리 국민이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에서 차이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11.0%로 스페인의 6.9%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높은 국가는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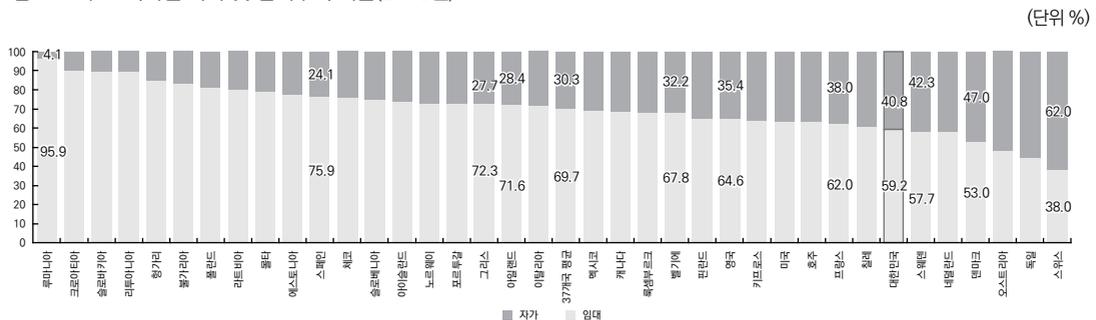
33.2%, 그리스 26.6%, 벨기에 23.7%, 스웨덴 22.3% 등의 순이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한국의 노인 단독 가구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20.8%로 4인 가구(7.4%) 대비 2.8배, 전체 평균 대비 1.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4인 가구에 비해 노인 단독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높았다. 소득 측면에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가운데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에서도 노인 단독 세대는 추가적인 생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별 가구 유형별 월 소득 대비 임대료 과부담 가구(RIR: Rent Index Ratio)의 비율을 보면, 자신의 소득에서 임대료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은 7.0%로 비교 대상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았다. RIR이 30%를 넘는 비율도 한국은 3.8%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낮았

7) 아래 그림과 같이 한국의 자가 대비 임대주택 비율은 유럽 국가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전세가 임대료 부담을 다소 낮추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택 형태도 점차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 비율이 2006년 22.4%에서 2014년 19.6%로 20%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9년에는 15.1%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월세(보증금 유무, 사글세 등)는 2006년 19.0%에서 2019년 23.0%로 4%포인트 증가하였다. 월세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다는 점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평가된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거실태조사-행정구역별, 지역별 계층별 점유형태, 재인용).

참고표: 주요 국가별 자가 및 임대주택 비율(2018년)



자료: 장경석. (2020). OECD 자가 점유율 통계와 시사점.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4월호, 재인용 및 필자 추가.

표 1. 국가별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가구	노인 단독 가구	4인 가구
스웨덴	22.3	37.1	15.8
덴마크	18.3	30.9	8.8
벨기에	23.7	29.8	16.6
프랑스	19.6	24.4	14.7
스페인	6.9	12.3	4.4
그리스	26.6	31.0	26.0
아일랜드	18.7	16.9	14.5
영국	33.2	49.0	21.8
한국	11.0	20.8	7.4

주: 1)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2) 가구 가중치 기준임.

3)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 (중위 월 임대료 ÷ 중위 월 가구 소득) × 100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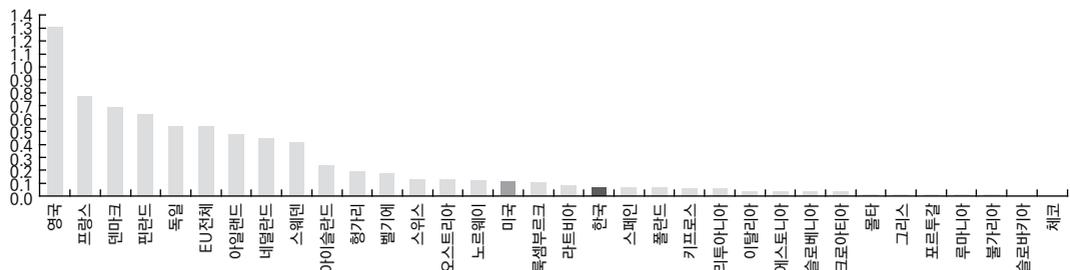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65).

다. 이는 비교 대상 유럽 국가와는 다른 한국의 '전세제도 운영'이라는 특징이 일정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구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RIR 20% 이상 비율이 한국은 18.7%로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에 비해 높았으며, 프랑스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RIR 30%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스웨덴, 덴마크, 영국, 벨기에 등에 비

해서는 낮았지만 다른 국가들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임대료 수준이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 낮지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면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이들 유럽 국가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보조 사업이 한국에 비해 발전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취약계층과는 차이가 있다.⁸⁾

8) 참고표: 한국과 주요 국가의 저소득층 주택 임대료 현금 지원액 수준

(단위: GDP 대비 %)



자료: 조동희, 김종혁, 김홍중, 문성만, 윤여준, 임유진. (2018). 소득주도 성장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p. 25 재인용.

표 2. 국가별 가구 유형별 월 소득 대비 임대료 과부담(RIR) 가구 비율

(단위: %)

구분	RIR 20% 기준			RIR 30% 기준		
	전체 가구	노인 단독 가구	4인 가구	전체 가구	노인 단독 가구	4인 가구
스웨덴	31.7	56.6	8.7	16.3	43.1	0.9
덴마크	24.1	50.5	5.6	10.5	30.4	0.0
벨기에	21.7	26.1	9.2	12.1	18.2	3.1
프랑스	17.9	20.8	6.5	7.8	8.9	1.8
스페인	11.3	5.7	10.8	6.9	3.4	6.8
그리스	12.7	5.2	14.0	7.5	3.1	8.2
아일랜드	15.6	8.4	12.0	8.4	5.7	3.4
영국	24.8	30.5	13.2	17.9	26.7	8.2
한국	7.0	18.7	2.7	3.8	13.9	1.4

주: 1)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2) 가구 가중치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66).

3. 소득 분위별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지금까지의 분석이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소득 분위별⁹⁾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소득 분위별로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살펴보면, 소비지출 및 소득을 기준으로 한국은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분위를 기준으로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은 소비지출 대비 17.1%, 소득 대비 15.1%로 다른 비교 분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비교 대상 유럽 국가들과 함께 살펴보면, 전체 분석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분위에서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국가와 분석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소득이 낮은 1분위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유럽 국가의 저분위 가구들은 20% 중반 이상의 높은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나타내며, 특히 영국은 다른 국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이들 국가는 저소득층 대상 임대료 지원이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주거·수도·광열비에 대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 정도는 한국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¹⁰⁾

노인 단독 가구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분위별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살펴보면, 한국

9) 소득 분위 구분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소득을 기반으로 소득 분위기를 구분하였다(김기태 외, 2021).

10) 실제로 저소득층이 소득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분석해야 하지만, 여기서 이를 다루지 못한 점은 분석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표 3. 소득 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

(단위: %)

소비지출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29.5	24.9	19.1	15.5	15.4	19.7
덴마크	33.2	27.5	20.4	16.8	15.7	21.4
벨기에	26.1	17.8	14.3	11.8	10.6	14.9
프랑스	21.8	19.2	16.2	13.3	11.7	15.4
스페인	18.4	15.1	13.0	12.2	11.4	13.3
그리스	17.9	15.9	13.8	12.4	10.3	13.2
아일랜드	25.0	19.7	15.0	12.5	10.8	15.3
영국	34.5	22.7	15.7	12.5	10.8	17.2
한국	17.1	12.9	10.9	10.2	9.0	11.2
소득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32.6	19.0	13.7	10.6	8.0	13.4
덴마크	33.1	20.6	13.3	9.7	7.2	13.0
벨기에	28.8	17.1	12.7	9.7	7.1	12.3
프랑스	25.1	16.8	12.7	9.5	6.3	11.0
스페인	29.7	17.7	13.5	11.6	8.9	12.9
그리스	38.1	19.3	15.1	12.2	8.3	13.6
아일랜드	29.0	16.1	11.2	8.6	6.0	10.8
영국	51.4	20.8	12.3	8.6	5.7	12.3
한국	15.1	9.1	7.0	6.1	4.4	6.8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67, 68).

표 4. 소득 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노인 단독 가구)

(단위: %)

소비지출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36.3	26.3	31.5	26.4	21.2	31.5
덴마크	40.3	36.9	32.4	21.1	26.8	36.3
벨기에	27.8	20.2	23.8	19.0	18.3	23.1
프랑스	26.6	27.8	24.1	19.6	18.8	23.6
스페인	21.0	22.0	21.9	18.8	19.2	20.8
그리스	19.2	19.6	17.5	17.8	16.7	18.3
아일랜드	24.4	21.6	16.8	12.0	12.9	20.4
영국	43.3	31.6	24.9	19.2	18.7	32.4
한국	26.2	24.7	34.3	20.4	11.0	25.3
소득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39.7	26.3	17.6	18.6	8.7	29.1
덴마크	37.9	32.4	25.2	17.5	9.6	22.2
벨기에	32.0	20.7	22.5	16.4	10.2	16.5
프랑스	26.4	22.1	16.9	12.5	9.8	17.4
스페인	26.5	20.0	18.0	17.3	12.3	17.4
그리스	27.1	20.6	16.4	14.9	11.6	17.4
아일랜드	22.2	17.1	11.0	8.2	6.7	15.6
영국	45.4	25.9	17.2	11.4	8.7	25.4
한국	21.1	15.9	19.1	12.2	4.8	17.9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70).

표 5. 소득 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4인 가구)

(단위: %)

소비지출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25.0	20.5	14.1	12.0	12.3	14.5
덴마크	26.9	23.7	15.8	17.2	13.9	17.6
벨기에	26.5	12.2	8.9	7.6	8.3	10.2
프랑스	16.5	15.0	11.1	9.9	9.4	11.3
스페인	17.2	12.3	10.4	9.8	9.9	11.3
그리스	16.1	15.9	11.2	11.8	8.9	12.0
아일랜드	20.5	19.7	14.6	11.0	10.4	13.9
영국	27.1	19.3	11.5	10.1	6.8	12.3
한국	12.5	10.8	9.1	9.5	8.2	9.5
소득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22.7	14.5	9.9	8.5	7.0	9.8
덴마크	26.1	13.4	8.9	8.9	5.9	9.2
벨기에	27.3	11.1	7.8	5.7	5.5	8.1
프랑스	20.5	13.3	8.8	7.0	5.1	8.0
스페인	27.7	15.7	11.6	9.6	8.2	11.7
그리스	40.1	21.1	13.8	12.6	8.1	14.0
아일랜드	21.7	16.0	10.7	7.1	5.1	8.9
영국	42.3	16.0	8.4	7.0	3.4	8.1
한국	11.7	7.9	6.6	6.2	4.2	6.2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원.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71).

의 노인 단독 가구 중 소득이 낮은 1분위는 소비 지출과 소득에서 모두 다른 분위에 비해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 지출에서는 중간 수준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2분위와 3분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소득 대비 부담 수준은 한국이 비교 대상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 단독 가구에 비해 4인 가구는 소비지출과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대부분의 소득 분위에서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비교 대상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4. 나가며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소비지출 및 소득 기준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소비지출 대비 11.2%, 소득 대비 6.8% 수준이었다. 비교 대상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소비지출 대비 15% 이상, 소득 대비 10%대를 보였다. 한편 가구 유형별로 보면, 한국의 노인 단

독 가구는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미흡하여 노인빈곤율이 높은 가운데 소비가 억제되는 상황에서도 부담이 높다는 점은 한국 노인 단독 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 5분위로 나누어 유럽 국가와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모든 분위에 걸쳐 비교 대상 유럽 국가들보다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낮았고, 각 분위 간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수준 격차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하지만 설명한 것과 같이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김기태, 2021). 첫째, 한국에 존재하는 전세제도는 유럽 국가에 비해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낮추는 데 주요하게 기여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대료 수준은 유럽 국가에 비해 집값 대비 낮은 수준으로, 이로 인한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한국에서는 주거·수도·광열비 항목 중 전기, 수도요금에 대해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다고 볼 수 있다(김기태 외, 2021).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면 유럽 국가에 비해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이 낮으므로 지원 방안이 없어도 된다거나 낮추어도 된다는 식의 제안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유럽 국가와의 실태 비교 속에서 유럽 국가의 높은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에도 국민, 특히 저소득층이 부담을 갖지 않고 생활하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향후 한국도 부동산 가격 변화로 인해 전세가 축소되고 월세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2022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전기, 수도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제든지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은 높아질 수 있어 이들 비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저소득층 대상 지원 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면, 저소득층 대상 임대료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¹¹⁾ 여전히 저소득층, 특히 노인 단독 가구는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다른 분위에 비해 높으므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급여 확대가 필요하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도입되었고 2015년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임대료와 주거급여 대상이 협소하여 저분위의 주거 불안정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와 같이 월세 등의 임대 가구가 증가하는 주택시장 변화를 고려하여 주거급여 기준과 급여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노인 단독 가구는 물론 청년 등과 같은 주거 취약계

11) 주거복지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하나는 주거비 보조, 임대료 지원, 근로자 및 서민 대상 전세 및 주거비 대출 지원 등과 같은 대인 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대물 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들 수 있다(김현희, 2012).

층을 대상으로는 과감한 임대료 보조 혹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희. (2012). 주거비 지원에 관한 주요 국가의 법제 고찰.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장경석. (2020). OECD 자가점유율 통계와 시사점.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4월호, 1-10.
- 조동희, 김종혁, 김홍중, 문성만, 윤여준, 임유진. (2018). 소득주도 성장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거실태조사-행정구역별 점유형태.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에서 2021. 10. 3. 인출.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통계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Eurostat.

A study on the housing, water and electricity expenditure burden of households in Korea and eight European countries

Kim, Tae-Wa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this article, we analyzed the burden of housing and water and electricity costs in European countries and Korea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Korea and the European Household Budget Survey (HBS). Our analysis found that the burden of housing, water, and electricity costs, as a share of consumption expenditure (11.2%) and of income (6.8%), was lower in Korea than in Europea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burden was not any lower in Korea when only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considered. Korea had a lower burden of housing, water and electricity costs than European countries for all income quintiles. However, in Korea, the jeonse rental system and state-controlled pricing of electricity and water seem to have had a certain impact.

On the other hand, European countries have a systematic housing welfare system for the underprivileged, which can be seen as a major factor in lowering the burden of housing and water and electricity costs. For Korea, additional policy responses are needed as water and electricity costs turned unstable lately due to the increase in monthly rent and the fluctuating raw material prices.

부록

한국과 유럽 8개국 가구 지출의 비교 분석을 위한 기준

이번 연구는 한국 가계의 핵심생계비 지출 수준을 비목별로 나누어 유럽 8개국과 비교·분석한 것이다.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기준을 설정했다.

첫째,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으로부터 유럽 28개 국가 가계의 지출 항목을 담은 **가구지출설문(HBS: 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를 확보하여, 한국 **가계동향조사** 비목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두 조사 모두 가계 지출 항목의 기준으로 국제 기준인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를 활용하고 있다(통계청, 2020).

둘째, 두 자료를 이용해 **유럽의 네 가지 체제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를 각각 두 개씩 골라 한국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했다. 유럽의 여덟 나라는 스웨덴과 덴마크(북유럽 모델), 프랑스와 벨기에(보수주의 모델), 영국과 아일랜드(자유주의 모델), 스페인과 그리스(남유럽 모델)이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해당 국가 통계청의 비협조와 자료의 일부 변수값 부재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누락됐다.

셋째, 가구 유형을 ① 전체 가구 ② 노인 단독 가구(65세 이상) ③ 4인 가구(부모+자녀 2인)로 나누어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교육비 분석에서는 교육비 지출 액수가 적은 노인 단독 가구 대신 3인 가구를 포함했다. 4인 가구의 경우 자녀 연령 설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자녀의 연령을 만 16세로 설정하였다. 한국에서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유럽은 그러한 사례가 적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였다. 또한 유럽 가구지출설문 자료상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스웨덴 등)가 존재하고, 별도로 구분해 둔 가구 유형에서 자녀의 연령 기준을 16세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넷째, 필수재의 범주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로 한정했다. 우선 집합재로서의 4개 범주(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를 대분류 기준으로 정하여 분석했다. 한국 가계동향조사와 유럽 가구지출설문 모두 가계 지출의 범주를 ① 식료품·비주류 음료 ② 주류·담배 ③ 의류·신발 ④ 주거¹⁾·수도·광열 ⑤ 가구용품·가사서비스 ⑥ 보건 ⑦ 교통 ⑧ 통신 ⑨ 오락·문화 ⑩ 교육 ⑪ 외식·숙박 ⑫ 기타 상품 및 서비스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물론 ① 식료품·비주류 음료 역시 필수재로 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사회 정책의 대상 범주인 다섯 개 범주 가운데 교통·통신으로 묶어서 네 범주로 한정했다.²⁾

1) 주거비에는 실제 임대료, 귀속임대료(Imputed rent), 주택 유지 및 수선비,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연료비 등이 포함된다. 이번 분석에서는 귀속임대료를 주거비에서 제외하였다. 참고로 귀속임대료를 소비지출에 포함할 경우, 유럽 국가의 주거비 부담 비율은 크게 상승했다. HBS를 분석한 결과, 스웨덴은 소비지출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이 31.7%로 귀속임대료를 제외할 때(19.6%)보다 12.1%포인트나 증가했다. 반면, 한국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귀속임대료 관련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물론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생활 분야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복지 영역에 포함된다. 더욱이 식품 지원 사업 등 복지사업에 포괄되는 영역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문화복지(최종혁, 이연, 유영주, 안태숙, 2010) 등 다른 지출 영역도 대부분 이번 분석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 보고서는 사회 정책의 영역을 다소 협소하게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로 한정했다.

다섯째, 자료 분석 연도는 2015년도로 정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가계동향조사는 비교적 최근 자료인 2019년 혹은 2020년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가구별 소득값이 존재하지 않고, 소득구간 변수만 제공된다는 점에서 소득 변수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소득값이 제공되는 가계동향조사(분기) 자료는 연간화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연간 소득 통계가 확보되는 2015년 자료를 활용했다. 실제로 가계동향조사의 2015년 자료와 2019년 자료를 탐색적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값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한 유럽 가구지출설문의 2015년 데이터가 가장 최근 자료라는 점도 염두에 뒀다. 5년마다 생성되는 HBS 자료의 2020년 데이터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물론 연구 시점보다 7년 앞선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참고로 영국은 HBS에 2015년 자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2010년 자료를 사용했다.

여섯째, 한국이나 유럽 국가 가구들의 총소비지출액 대비 개별 소비지출 비율을 구하는 방식으로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 방식은 가구별 비율을 구한 뒤 평균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전체 가구의 특정 지출액을 합산한 값을 전체 가구의 전체 지출액을 합산한 값으로 나누는 것이다.** 다소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해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한 나라에 A, B 두 가구만 있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방식대로 총소비지출액 대비 교육비 지출액 비율을 구하면 $70\% [0.7 = (A\text{가구 비율 } 0.4 + B\text{가구 비율 } 1.0)/2]$ 가 된다. 두 번째 방식대로 계산하면 비율이 크게 줄어들어 약 40.5%가 되는데, 계산식은 $0.405 \approx (4,000 + 100)/(10,000 + 100)$ 이다. 두 방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전체 가구의 전체 지출 중 특정 지출 비율을 재는 두 가지 방식

구분	총소비지출액	교육비	가구 비율 평균 기준	전체 가구 전체 지출액 평균 기준
A가구	10,000	4,000	$0.4 (= 4,000/10,000)$	
B가구	100	100	$1.0 (= 100/100)$	
합계	10,100	4,100	$0.7 (= (0.4+1.0)/2)$	$0.405 (= 4,100/10,100)$

자료: 필자 작성.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 전체 소비지출과 함께 계산식에 들어가는 소득이 0인 가구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구는 예를 들어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액을 계산할 때 분모가 0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이 0인 가구가 46가구 있었다. 소득이 0인 가구를 제외하더라도, 소득이 매우 적고 지출액이 많은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소득 대비 특정 범주 지출액 비율은 지나치게 큰 수치가 되고, 이러한 가구들의 비율이 전체 평균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경상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이 200%가 넘는 가구가 26가구 있었다.

일곱째, 소득 기준은 총소득, 엄밀히 말하자면 비경상소득이 포함된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소득³⁾으로 산출했다. 김기태 외(2019)의 연구에서는 가처분소득을 국제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했으나, 유럽 가구지출설문에서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럽연합 통계청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총소득 기준을 활용했다.

여덟째, 소득 및 모든 지출 항목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균등화했다. 교통 및 통신비는 균등화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가구 지출 부담을 반영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의 통일성 측면에서 모든 비목을 균등화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김기태, 정은희, 이주미, 최준영, 이병재, 박은정, 송지원. (2019).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종혁, 이연, 유영주, 안태숙. (2010).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기능: 문화복지실천가 대상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1), 291-316.
- 통계청. (2020). 「가계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대전: 통계청.
- Eurostat (2021. 9. 14.) RE: Re:RE: An inquiry regarding HBS datasets from KIHASA - RPP73/2021 - HBS 이메일 답변.

3) 소득 변수(EUR_HH095)의 범위에 대해 유럽연합 통계청에 문의한 결과 각 국가에서는 연간 기준의 소득값을 제공하며, 따라서 비경상소득이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즉, 분석에 활용한 소득 변수(EUR_HH095)는 비경상소득이 포함된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소득값으로, 경상소득만을 구분하여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HBS는 소비 관련 자료를 주로 담아서, 가처분소득과 같은 자세한 소득 자료는 담고 있지 않는 한계가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 통계청은 연구진이 보낸 문의 사항에 대한 답신에서 복권과 같은 비경상소득도 소득 변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유럽 국가들에서 월 소득이 아닌 연 소득 값을 보내면서 비경상소득도 대체로 포함한다. 일부 극단값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유럽연합 통계청은 HBS 자료상에 나타나는 극단값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Eurostat, 2021. 9. 14. 이메일). 이 연구 과정에서도 일부 극단값이 발견되었으나, 연구진이 검토한 결과 교육 분야에서 나타난 하나의 값을 제외하고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유럽연합 통계청에서 극단값을 조정할 결과를 재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실제 분석 과정에서 평균값을 좌우할 정도의 극단값은 찾기 어려웠다. 셋째, 일부 매우 큰 값도 실제 소비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